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장종태 · 채현일
박정현 · 모경중 · 위성곤
김용민 · 황명선 · 이광희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,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
특히 “행위”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,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,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(안 제2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0조제1항 중 “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등·재산·행위·소속단체”를 “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등·재산·소속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	당선 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 ・放送・新聞・通信・雜誌・壁 報・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 서 같다)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자,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<u>출생 지・가족관계・신분・직업・경 력등・재산・행위・소속단체</u> ,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[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 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]을 公表하거나 公表 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を 配布할 目 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	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	----	----
② ~ ④ (생략)	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